

(사)대한산란계협회		<b>보 도 자 료</b>		번창하는 산란산업 활기찬 농장 만족하는 소비자	
보도 시점 : 2025. 3. 19.(수) 09:00					
담당 부서	(사)대한산란계협회 사무국	책임자	회 장 안두영(010-3723-1332)		
		담당자	전 무 김경두(010-3722-2822)		

<p style="text-align: center;"><b>계란 1개에 천원, 미국만의 문제 아니다</b></p> <p style="text-align: center;">- 국회 민생현안 간담회에서 계란 생산량 30% 감소시키는 규제 철폐 건의 -</p>
---

3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원장실에서 계란 생산과 관련된 “민생현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는 농해수위원장 어기구 의원(당진시)과 윤종균 의원(안성시)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계란 생산 농가로 구성된 (사)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과 임원 및 생산 농가 등이 참석하여 계란 수급과 가격 및 현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사)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계란 생산과 관련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건의하였다.

첫째는, 산란계의 사육수량을 감소시켜 미국과 같이 계란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는 사육기준 면적의 소급적용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40개주는 규제 없음)에서 산란계 사육방식을 케이지 사육에서 케이지 없는 사육방식(평사, 방목)으로 전환할 것을 규제하자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고, 방목 등에 따른 철새와의 접촉 증가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증가 및 이에 따른 살처분의 확대로 금년 2월말 달걀 가격이 1개당 최고 1,017원까지 폭등했다(출처 : USDA).

미국은 일부 주의 이와같은 규제정책으로 2021년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고착화되었고, 2024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4천만 마리(전체 사육수량 3억 8천만 마리의 11%), 금년에도 약 2,600만 마리(전체의 6.8%)가 살처분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사한 산란계 사육방식 규제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9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마리당 케이지 규격을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산란계의 사육 마릿수는 약 30% 가량 줄어들고 1일 계란 생산량(소비량)도 약 5천만개에서 3,500만개로 줄어든다. 100% 자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일 약 1,500만개의 계란이 부족하게 된다.

미국은 2년에 걸쳐 약 18%의 산란계 사육수량 감소로 에그 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계란 가격이 폭등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육방식 규제로 30% 가량의 생산이 줄어들고,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중복된다면 미국보다 더 심각해 질 수도 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마리당 사육 면적이 확대되면 닭 진드기의 발생이 줄어들고, 진드기 발생이 줄어들면 살충제 사용이 감소하고, 그러면 계란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주장에는 2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는, 사육면적과 닭 진드기 발생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사육기준 면적이 작은(0.042제곱미터/마리) 일본이나 캐나다 등이 진드기 발생이 가장 적다. 진드기 발생은 사육면적이 아닌 위생관리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PLS(농약안전관리시스템) 제도 시행으로 산란계 사육시에는 살충제나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농약 등을 살포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농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그 벌칙이 가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모두 무농약, 무항생제 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육기준을 확대하여 농약 사용을 낮춘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2023년에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산란계 사육면적 개정에 따른 국내 농가 대응 실태·과급효과 및 국외사례 조사)에서

도 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계란가격이 최고 57%까지 상승하고 전후방 산업도 약 2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계란 부족현상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1월 사육중인 산란계에 대해서는 2년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 또한 닥쳐올 문제를 잠시 뒤로 미루었을 뿐 계란가격 폭등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안두영 회장은 둘째로, 17년간 변경되지 않고 있는 산란계의 비과세 수준을 1만 5천 마리에서 5만 마리로 상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비과세 기준을 정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만 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의 연평균 수익은 마이너스 0.7%이고, 2만 마리 미만 사육은 17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2.7%에 이른다(출처 : 통계청).

따라서 비과세기준 1만 5천 마리는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아니라서 과세 기준으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물가안정과 조세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피해 보전 안정적인 계란 생산을 위하여 비과세기준을 5만 마리로 상향 조정해 주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어기구 위원장은, “행위 당시의 법에 맞게 시설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기준을 개정한 후에 이를 소급적용토록 하고, 시설 내구연한이 30년인데 수십억을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을 어떤 보상도 없이 7년만 사용하고 바꾸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균 의원은 “불합리한 정책으로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농가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면서, “건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 확대 소급적용 철폐

### □ 현황

- 정부가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AI 발생 방지)을 목적으로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 한 후, 개정 전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까지 소급하여 개정기준 적용
- 현재, 정부는 사육면적 확대에 대하여 국민 동의를 소구하기 위해 기준확대와 무관한 식품안전, 동물복지 등으로 명분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붙임 참고)

<해당 법령 내용(축산법 시행령 부칙 제4조, 2018.7.10.)>

- ❖ 종전시설도 마리당 사육 기준면적을 2025년 8월 31일까지 개정기준을 따를 것
- ※ 마리당 사육기준 면적 : (종전) 0.05㎡/마리 → (개정) 0.075㎡/마리

- (현재 농식품부 입장) 개정안은 시행하되, 2년간 단속을 유보
- \* 유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표시, 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한 대책은 없음

### □ 문제점

- 위헌 : 법 소급적용으로 신뢰 상실, 개인재산권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 법 개정 의무사항인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효과 왜곡(허위 자료) 및 피해 축소
- 비례의 원칙 위배(효과에 비하여 피해가 과다)
- <효과>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약 10% 감소로 정부예산 연간 66억원 절감
- <피해> 효과에 비하여 생산자, 소비자, 전후방산업 등에 과다한 피해 발생
- \* 생산자 : 농가 매출 33% 감소(7,200억원/년), 시설 교체비 과다 소요(약 2조원)
- \* 소비자 : 계란가격 50% 이상 상승(민간가계지출 연 7,700억원 증가)
- \* 전후방산업 : 사료·유통·가공·빵·김밥 업체 등 피해(약 1조 7천억원/년)
- \* 식량안보 : 계란 100% 자급 붕괴(미국은 유사정책으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략)
- \* 역차별 : 일본·중국 등 대부분 국가는 기준 없음(현재, 중국 등에서 가공란 수입 중)
-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도 미국·일본 등의 반대로 국제기준 미채택

### □ 우리 협회 대응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2024.10.21.) : 심판 회부(심리 중)
-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청구(2024.11.14.) : 심리 중

### □ 건의사항

- 법 개정(2018.7월)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내용연수까지 종전기준 적용
- 개정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말고, 신규 시설부터 적용

## 산란계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

### □ 현황

- 닭의 비과세 사육두수(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는 2008년 2월 15,000마리로 결정된 이후 17년간 조정되지 않고 있음
  - 다른 축종은 2012년에 상향 조정됨(소 30 → 50마리, 돼지 500 → 700마리)
- 결정 당시보다 물가(사료값, 시설비 등)가 대폭 상승하였고, 경영악화로 영세한 산란계 농가의 폐업율이 44%에 달함
  - 산란계 사육농가 : <2008년> 1,711농가 → <2024년> 953농가
- 계란은 장치산업으로서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익성이 낮음을 고려할 필요
  - 4만 수 미만 농가의 17년간 평균 수익성은 -6.0%로 적자 상태임
  - 특히 2만수 미만은 대규모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연도(2017, 2021)를 제외 하면 대부분 -10% 이상의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산란계 연도별 마리당 수익률 %(출처 : 통계청)>

연도 규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2만 미만	6.7	-27.1	-21.7	-11.6	-33.9	-18.1	-5.7	-11.7	-13.1	10.4	-30.1	-25.5	-17.9	14.4	-4.4	-14.3	-12.7
2~3만	-6.3	-6.2	-19.6	-4.4	-25.9	-8.9	2.2	0.7	-4.6	25.8	-31.9	-16.9	0.6	20.8	7.0	-5.0	-4.5
3~4만	-11.0	0.1	-16.7	-6.2	-26.6	-2.2	4.0	1.4	6.9	30.5	-27.9	-8.5	1.5	33.0	16.3	-5.0	-0.7
4만 이상	-6.3	-5.1	-11.6	-1.4	-17.8	3.2	14.2	9.2	7.6	28.9	-1.5	-4.4	12.1	41.7	17.1	7.9	5.9
평균	-4.6	-7.4	-14.1	-3.2	-20.7	-1.0	11.6	7.2	6.0	27.9	-8.6	-7.0	8.3	37.9	15.5	10.6	3.7

### □ 필요성

- 계란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농가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음
  - 미국은 계란가격 급등의 여파로 모든 식품 물가가 상승하는 에그플레이션 발생
- AI 등으로 인한 규제 강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압력 증가로 농가의 소득 감소와 경영 불안 가중 → 조세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피해 보전 필요
  - 대부분 소득이 마이너스인 상황이어서 세입 감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 건의 사항

- 닭의 비과세 사육 기준(농가 부업농 규모)을 상향 조정
  - (현재) 15,000마리 → (개선) 50,000마리

<사 진>

